



보도자료

2021. 12. 2. (목)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18’

“제2의 김미영 팀장 없을 것!”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발표

-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 1천명에 한 명꼴 발생, 누적 피해금액 조 단위… 수법 나날이 고도화
- 경기도 불법사채업·기획부동산 등 ‘민생범죄’ 근절 성과 토대로 ‘보이스피싱’ 근절 약속
- 이재명 후보, “끝까지 추적해 한 톨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다”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1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제도 정비는 물론 통신사·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국적을 초월한 공조 등이 포함된 전방위적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는 신고된 건수만 52,165건으로, 국민 1천명당 한 명꼴로 피해를 입었다. 누적 피해 금액도 조 단위를 넘어섰다. 미신고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후보는 몇몇 피해사례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을 “어려운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미는 악질 범죄”로 규정하며,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상세하게 밝혔다.

먼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역할의 전국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민생범죄 근절’에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사채업자 소탕, 기획부동산 단속 등에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했다.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역시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신종 유형의 피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 전파시스템 도입, ▲경찰청이 개발한 보이스피싱 방지 앱의 휴대전화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 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며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통신사·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도 언급했다. ▲통신사의 ‘스팸 사전안내 전용앱’

대응 속도 향상,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규정 강화, ▲지급 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의 인출 제한 강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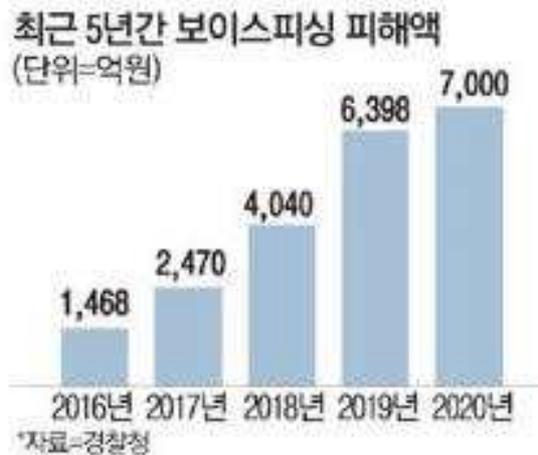
또한, 가해자 처벌 수위를 재검토하는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문제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과도하게 수사받거나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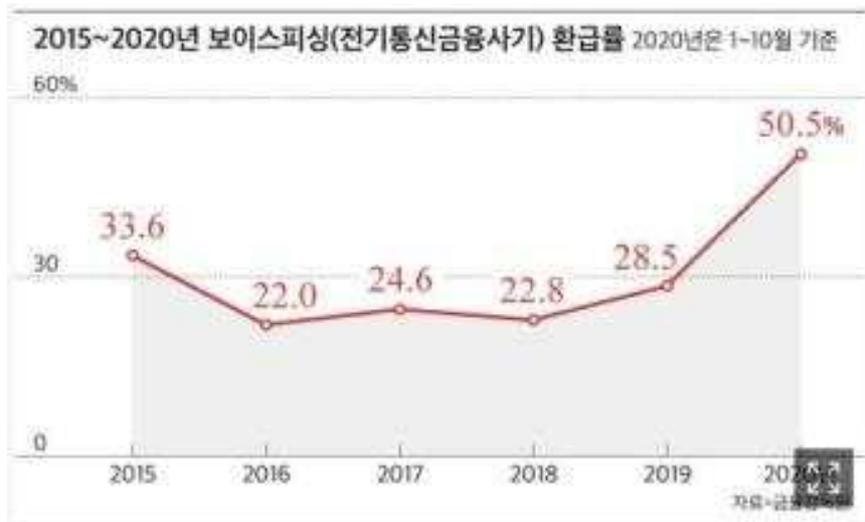
[붙임] 참고자료

1.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 ① 피해액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 코로나로 인해 피해 숫자는 감소



- ② 환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여전히 50% 이상이 피해 금액을 못 돌려 받는 등 고통 가중



2.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의 고도화

- ① (범죄수단 다양화) 최근 대포폰 확산은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선불폰*·외국인 명의폰**을 중심으로 발생

- *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차단한 전화번호 중 선불폰 전화번호가 84% 차지('19)
- ** 외국인 여권·등록증 등을 매입해 대포폰 개통·유통한 일당 검거 사례 매년 발생

- 소위 '내구제'(나를 구제하는) 대출을 조건으로 한 고의적 명의 대여 및 다수의 통신사를 이용한 대포폰 다회선 개통도 빈발

- * 통신사 별로 휴대전화 가입 회선수에 제한을 두고 운영 중이나, 한사람의 명의로 통신사를 바꿔가며 휴대전화를 대량 개통하여 악용하는 사례 빈발

- 분실·도난폰 매입 후 불법·조직적 개인정보 탈취 사례도 속출

② (범죄수법 고도화) 추적이 곤란한 인터넷전화와, 해외발신 전화도 국내번호(010)로 변조할 수 있는 SIM박스* 등이 보이스피싱에 악용

* SIM박스 : 다른 번호의 유심(USIM)을 최대 256개까지 꽂아 중계장치 등으로 이용

< SIM 박스 운용 형태 >



<참고 :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중계소 운영 방식>



③ [신종 수법 등장] 금융과 ICT가 결합된 신종 수법 등장 · 확산

①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을 설치하여 금융회사에 전화를 하더라도 보

이스피싱 조직으로 통화가 연결되는 수법

* 가로채기앱 탐지건수 : 1,825건('17) → 4,223건('18) → 5,855건('19), (KISA)

② (원격제어 앱 악용) 허위 결제메시지를 전송한 후 원격제어 앱*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피해자 휴대폰 금융 앱에서 금전 탈취

* 해당 앱 자체는 PC 등에서 휴대폰에 접속하여 장애해결 등에 이용되는 정품 앱 (QuickSupport 등)이나, 동 앱을 범죄조직이 원격제어를 통한 보이스피싱에 악용

- 특히, 휴대폰 원격제어와 동시대출이 결합시 피해가 크게 증가*

* 예) 원격제어앱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한 후 모바일 금융 앱을 실행하여 다수의 동시대출을 받은 후, 3.2억원의 자금을 탈취 ('19.5월)

③ (메신저 피싱) 카카오톡 등 메신저 계정을 해킹하거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 송금 등 유도

* (메신저 피싱) ('17) 58억원 → ('18) 216억원 (272%↑) → ('19년) 342억원 (58.2%↑)
→ ('20.1~4월) 128억원 (52.3%↑)

3. 보이스피싱 청정 프로젝트

① 보이스피싱 수사·단속 강화

-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 전개

- (i) '미스터리 쇼핑' (함정수사) 수사기법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최대 수집하고 즉각 차단
- (ii) 범죄에 쓰인 대포통장과 가상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 (iii) 휴대폰 단기 다회선 개통시 가이드 마련 등을 통해 다회선 개통 억제

② 고도화되는 수법에 대응

- 이통사 '스팸 사전안내 전용앱' 의무화(무료화) 등 대응속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

- 보이싱피싱 유무 확인 '114 음성안내' 확대
- 보이싱피싱 피해 신고 후 지체없이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 (i) 공공·금융기관의 주요 전화번호 **화이트리스트*** (변작 차단 목록) **탑재 대폭 확대**(기관 확대 및 현재 대표번호 위주 → 모든 보유번호 단계적 확대)
- (ii) **대량 문자발송 대행업체** 등의 신청자 전화번호 확인(위·변조 여부) **절차를 강화**하고 **빈도도 확대** (최초1회 인증→ 주기적 인증 도입)
- (iii) 발신번호 거짓표시(변작) 관련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3→5천만원)

- 경찰청이 개발한 악성 앱 탐지어플 <시티즌 코난> 휴대폰 의무 설치 추진

③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

- 보이싱피싱에 이용된 신규 전화번호 전 국민 재난문자처럼 즉각 발송
- 철저히 대응하고 끝까지 추적
- 보이싱피싱 및 유사 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강화

④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싱피싱 수법에도 적극 대응

- 보이싱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SIM 박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사전에 제거

- (i) **SIM박스 밀수** 등 단속을 강화하여 범죄이용을 방지
- (ii) 국내에 반입된 **SIM박스**에 대해서는 **최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단속, 탐지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도 지속 개발

- 보이싱피싱에 이용되는 악성앱·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단을 신속·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i) 악성앱, 피싱·해킹사이트 접속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요청 수
행하도록 제도 개선
- (ii) KISA - 금융보안원 간 보이스피싱 신종수단 정보 공유 체계 강화

5 피해자 및 선의의 피해자(가해자로 몰린) 구제 강화

- 사건 종료 전이라도 도용당한 피해자 통장 해제
- 지급정지제도 및 피해배상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 보호
- 보이스피싱에도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
- 간편송금업자 등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